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 회고와 전망 -

Research Trends in Archival Appraisal Science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최재희(Jae Hee Choi)*

목차

- | | |
|------------------------|---------------|
| 1. 머리말 | 3.2 기록물 보유일정표 |
| 2. 정량적 분석 | 3.3 재평가 |
| 3. 주제별 내용 분석 | 3.4 민간기록물 평가 |
| 3.1 해외 평가이론의 소개와 현실 접목 | 4. 맺음말 |

<초록>

이 글은 국내 기록관리 학술논집에 발표된 논문을 정량적, 내용별 분석을 통해 기록물 평가론 연구동향을 파악하려 했다. 정량적 분석에서는 논문 게재 시기와 연구자 정보가 주요한 분석도구였으며, 내용적 분석은 해외 이론에 대한 소개와 현실 적용, 기록물 보유일정표에 해당하는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관에서의 재평가, 민간기록물 평가의 4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했다. 전체 33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평가를 주제로 한 논문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기록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자의 참여가 크게 줄어들었고, 내용적으로도 현재 기록물 평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나 대안 제시와 같은 논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론과 실무의 조응을 통해 평가 영역의 활성화와 다양한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제어: 평가, 거시평가, 보유일정표, 연구동향, 기록관리

<ABSTRACT>

This paper surveyed the research trends in archival appraisal science in Korea. All 33 articles from 4 relevant academic journals articles were analysed on the basis of quantitative measurement and thematic sorting. The number of the articles by the record managers or archivists working at the public bodies has especially decreased for some time past. A distinguishing feature was a decline in interest in the present appraisal system and methodology. Correspondence between practice and academic theory be required for the future development in archival appraisal.

Keywords: appraisal, macro-appraisal, retention schedules, research trends,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 고려대학교 사학과 강사(hardie@korea.ac.kr)

■ 접수일: 2011년 5월 2일 ■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1일 ■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22일

1. 머리말

대부분의 기록물 평가 관련 논문은 유명한 외국학자의 글이나 외국 기록물관리기관의 문서를 통해 기록물 평가의 정의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한다. 여기서 같은 내용을 새삼 강조하고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록물 평가와 관련된 법령 내용을 기초로 국내의 기록물 평가 유형을 구분한 후 짧으면 짧았고 길다면 길었던 기록관리 실무에서 느꼈던 평가 현황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싶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법)』 체계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록물 평가 실무는, 기록물의 물리적 상태평가를 제외하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생산단계의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이 있다. 정부기능연계모델(Business Reference Model, 이하 BRM)에 연동된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에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르도록 기록물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록관리기준표는 일종의 보유일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생산단계에서 이미 기록물은 1, 3, 5, 10, 30, 준영구, 영구라는 가치평가를 받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은 기록관(특수기록관 포함)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단위에서 진행되는 평가이다. 기록물법에 따르면, 기록관은 보관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생산부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

쳐 보존기간의 재책정이나 기록물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은 보존기간 30년 이하의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기록물이 기산일 70년 경과 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이 유형의 평가는 재평가로 불려도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록물법령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자료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거나 수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80조). 이 업무과정에서도 기록물에 대한 평가가 포함될 것이다.

먼저, 2007년 법률 개정 이후 4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보존기간 준칙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각급 기관에서 정하는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결정을 위한 준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물법 시행령 별표1에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록물 분류기준표 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기관 공통기능 및 고유기능을 포함하여 국가기록원에서 분류기준표를 총괄 작성하여 배포하고 고시했고 각급 기관이 신청한 분류기준표 변경 처리를 전담했었다. 당시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던 평가분류팀이라는 과 단위 조직이 있었다. 기록관리기준표 체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록관리기준표의 변경은 행정안전부 BRM 담당부서의 몫이다. 그래서인지 현재 기

록원에는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고 3개의 수집 담당과만 존재한다. 각 수집과에는 기록 연구직, 학예연구직, 사서직, 행정직이 담당부서를 분담해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국가기록물의 평가 영역에서 소외된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평가와 관련해, 생산부처의 견조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록물관리 전문위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기준이나 방법론이 존재하는가? 만일 있다면 그러한 평가 방식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행해지는 평가도 동일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을 선정하는 평가 기준과 방법론은 무엇인가?

기록물 평가의 중요성과 비중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물 평가실무의 현황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가치 및 평가 선별 기준을 고쳐하면서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려 하는 아키비스트의 모습은 국내 현실에서 찾기 어렵다. 울트라 젠킨슨주의가 기록물 평가영역을 장악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별 기록물의 이려저러한 가치이건, 사회의 반영으로서의 기록물이건, 또는 기록물이 미래의 활용을 위한 것이건 현재를 반영하는 것이건 간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을 포함해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의 평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 제대로 선별되어 미래의 기록유산으로 보존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소회를 바탕으로 깔고, 이 글은 지난

10여 년간 기록물 평가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기록물 평가이론의 동향과 성과를 정리함과 동시에 평가이론과 평가실무의 상호영향을 천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록물 평가에 대한 우리의 연구수준과 실무수준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여타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기록관리에서도 이론과 실무의 밀접한 조응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실무를 반영하지 않는 이론은 존립하기 힘들 것이다. 이론이 받쳐주지 않는 실무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미국아키비스트협회(SAA)의 아카이브대학원 교육과정 가이드라인도 독창적 연구와 경험적 학습을 통한 이론과 실무의 조응을 강조한다. 특히, 기록관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이면서 난해한 영역의 하나인 기록물 평가에서 이론과 실무의 조응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기록관리학 영역에서도 과거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려는 성과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던 2009년에 4편의 논문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먼저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2009)은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을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3종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44편에 나타난 제목의 구문 및 의미구조를 추적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록관리학 분야의 핵심 연구 대상 23개 가운데에서 기록물 평가는 출현빈도 상위 10개 가운데 포함되지 못했다. 연구대상의 지속성과 관심도 분석 결과 평가는 후반기 강성장형 연구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남태우와 이진영(2009)은 『기록보존』,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4종 399편의 논문을 주제영역과 키워드 빈도를 통해 분석했다. 김규환과 남영준(2009)은 지난 10년간 발간된 국내 3종의 기록관리학 관련 학회지(『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게재된 374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주제 영역과 연구배경 정보, 연구자 특성정보(소속 및 전공) 등을 분석한 바 있다.

장로사와 김유승(2009)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5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 1,555편 중 전자기록물과 정보기술을 주제로 한 정보학 영역의 연구논문 99편을 분석했다. 정보학에 집중한 장로사와 김유승의 연구는 기록물 평가이론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법령 제·개정이나 제도 변화 또는 관련 실무의 변화와 연동하여 기록물 평가 논문의 내용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조사 대상으로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인 『기록보존』과 『기록학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4종을 선정했다.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하다 현재 폐간된 『기록보존』을 학술지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필진의 대부분이 기록원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내용도 당시 현안이 되던 실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졌던 『기록보존』을 제외할 수 없었다. 특히 기록관리 전문연구인력이 확충되기 이전 시기에 『기록보존』이 차지하던 위상이나 기여는 무시할 수 없으며 이후에 발표된 많

은 연구논문도 『기록보존』을 인용하고 있다.

이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평가이론이나 실무와 관련된 논문은 물론이고 기록물분류기준표나 기록관리기준표 등을 주제로 한 논문 가운데 보유일정표를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평가를 실행에 옮길 때 보유일정표의 보존기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기록물 평가 관련 논문의 정량적 분석을 시도한다. 세부적으로는 학술지별·시기별 논문 게재 횟수와 비중, 그리고 연구자 정보 등을 분석할 곳이다. 둘째, 평가 관련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내용과 함의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 평가 관련 연구의 동향과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전망을 시도할 것이다.

2. 정량적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록보존』은 1987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기록원의 전신인 정부기록보존소가 연간 1회 발간한 잡지로 총 18호가 있다. 『기록학연구』는 2000년도 창간되었으며 한국기록학회 소속이다. 『기록학연구』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반기별로, 2009년부터는 분기별로 발간되어 현재 28호까지 발간되었다. 한국문헌정보학회가 발간하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1970년에 창간되었으며 1996년부터 계간으로 발간되고 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창간호부터 모든 논문을 다 조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다른 학술

지와의 형평을 고려해 기록물법이 시행된 2000년부터 조사했다. 한국기록관리학회에 의해 2001년에 창간된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반기별로 연간 2회 발간되며 2010년까지 10권 2호가 발간되었다.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기록물 평가 관련 연구 논문은 모두 33편이었다. 학술지별로 구분하면, 『기록보존』이 전체 219편 가운데 10편, 『기록학연구』가 전체 253편 가운데 18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전체 708편의 논문 중에서 2편, 『한국기록관리학회지』가 전체 172편 가운데 3편의 평가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 수치는 남태우와 이진영(2009)의 연구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다. 남태우와 이진영에 따르면, 평가를 주제로 한 국내 기록관리학 논문은 모두 22편으로 전체 논문의 5.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었다. 주제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평가’는 22편으로 전체 논문 수의 5.56%를 점했다.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1차 키워드에서 ‘평가’는 2.5%로 5.6%를 기록한 ‘기록관리’에 이어 두 번째였다.

남태우와 이진영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보이는 통계의 차이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 등이 일정한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제외하면 전체 644편의 논문 중에서 평가를 주제로 한 논문은 31편이며 그 비중은 4.8%가 된다. 어떤 통계를 이용하던지, 기록관리에서 평가가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기록물 평가 관련 논문의 수와 비중은 전체적으로 그리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재 시점을 중심으로 평가를 주제로 한 논문의 추이를 살펴보자. 조사 대상 학술지 가운데 기록물 평가 관련 국내 최초의 논문은 당시 국가기록원 행정주사였던 정병춘의 『기록물 평가에 대한 일고찰』로서 1994년에 발간된 『기록보존』7호에 게재되었다. 기록물법 시행 이전에 발표된 논문은 6편이었고 나머지 27편은 그 이후였다. 평가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시기는 기록관리 혁신 및 기록물법 전면 개정 작업이 한창이던 2006년이었다. 기록물법의 제·개정 등 기록관리 체계의 큰 변화가 있을 때에 그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영역 중 하나가 기록물 평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논문 수의 증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환경의 변화에 기록관리학계가 민감하게 적극 반응하였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평가를 주제로 한 논문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1> 학회지별 평가 논문 수와 비중

단위: 편

학회지/수	전체 논문 수	평가 논문 수	비중
기록보존	219	10	4.5%
기록학연구	253	18	7.1%
한국문헌정보학회지	708	2	0.2%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3	1.7%
전체	1,352	33	2.4%

〈표 2〉 연도별 평가 논문 추이

단위: 편

학술지	연도																			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기록보존	1	-	1	1	2	1	1	1	1	1	-	-	폐간				10			
기록학연구	창간 전						-	1	2	1	-	3	6	1	-	-	4	1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조사 제외						-	-	-	-	-	2	-	-	-	-	2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창간 전						-	-	-	1	-	1	-	1	-	-	3			
누계	1	-	1	1	2	1	1	2	4	2	1	3	9	1	1	-	4	33		

다음으로 연구자 정보를 분석했다. 전체 33 편의 논문 가운데 공동연구를 포함해 모두 25 명의 연구자가 평가를 주제로 한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논문 게재 당시를 기준으로 연구자의 직종을 구분하면 16명 대부분이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연구직 공무원이었다. 이들이 작성한 논문의 수는 15편이었다. 16명 중에서 3명을 제외한 13명이 논문 발표 당시 국가기록원(정부기록보존소)에 근무하고 있었다. 같은 기준으로, 교수와 연구원 등 민간 연구자 17명이 모두 18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기록보존』의 경우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했다는 특성으로 인해 단 1편의 논문을 제외하면 9편 모두 기록원 직원에 의해 작성되었다. 나머지 3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기록관리 관련 공무원은 4명이었으며 이들에 의해 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들 중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 소속은 단 1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2003년 이후 평가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국가기록원 직원도 1명이었다. 이것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교류가 소원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풍거 영역에서 이론과 실무의 조응이 매우 미흡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동시에 국가의 기록물 평가체계와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국가기록원 연구직들이, 기록관리의 다른 영역

에도 그러한지는 알 수 없지만, 실무와 연구를 병행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005년 이후 국가기록원을 포함해 많은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관련 전문 연구직의 수가 몇 곱절로 증가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3. 주제별 내용 분석

국내 평가 관련 논문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해외의 기록물 평가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국내 현실에 적용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둘째,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생산단계에서의 기록물 평가에 초점을 맞춘 유형이 있었다. 이들은 기록물 보유일정표라 할 수 있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 셋째, 기록물 재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록이나 아직 기록학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기록에 대한 평가 시도가 있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을 하나씩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 볼 것이다.

3.1 해외 평가이론의 소개와 현실 접목

기록물 평가와 관련된 초기 논문들은 외국

의 평가이론 및 평가 제도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진단하고자 했다. 정병춘(1994)은 “기록물의 행정적, 법적, 재정적 활용도와 증거적, 정보적 가치 또는 연구가치 및 배열과 다른 기록물과의 관례에 의하여 기록물의 가치와 폐기 등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기록물 평가(Appraisal of records)를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는 기록물 가치를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로 구분하는 등 쉘렌버그(T. S. Schellenberg)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라이프사이클 개념과 영국의 그리그 시스템도 언급되고 있다.

당시 정부기록보존소 전문위원이던 김익한(1998)은 쉘렌버그와 붐스(H. Booms)를 중심으로 개별 평가이론의 내용은 물론 이들 이론의 출현 배경과 맥락 등 해외 평가이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정보가치의 중요성 파악이 주관성 문제와 더불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라는 이유로 미시적 관점에서 기록물을 파악하는 방법론을 비판했다. 대신 “현대사회의 최대한의 모습을 최소한의 기록물을 이용하여 미래에 전하는 것”이라는 붐스의 정의와 더불어 업무가치가 생성되는 생산단계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평가분류론이 변화하는 흐름을 소개하면서 이를 능동적이고 거시적인 방법론이라 평가했다.

김익한은 나아가 이러한 평가이론이 중간보존기관의 역할을 자료관과 최종보존기관에서 분담하고 생산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국내의 흐름과 잘 어울린다고 전제하면서, 각 생산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자료관 설치를 통해 거시적 평가의 전제조건인 기록물에 대한 조사 등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종보존기관과의 연계성도 강하게 유지된다고 말한다. 제정 준비 중인 기록물분류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그 기록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종합적 관리스케줄로 기능할 것이며 생산기록물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스케줄을 정해가는 작업은 거시적 평가분류 방법론을 실험해 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에도 국내 기록물 평가실무가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익한의 이러한 입장은 그 함의를 다시 한 번 반추할 만하다.

역시 정부기록보존소 전문위원이던 이상민(2000)은 “기록보존소는 반드시 보존 기록물에 대해 가치 평가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지적인 통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ICA 가이드를 근거로, 전자기록물 환경에서 기록물 평가 작업은 반드시 기록물 라이프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수행되거나 때로는 기록물이 생산되기도 전에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기록을 생산하는 기관의 기능과 업무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에 근거한 가치평가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가치평가 방식은 기록물이 생산되고 이용되는 기능과 업무활동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기능별 가치평가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사실상 기능평가를 처음 소개한 것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평가 부분을 서문과 결론을 포함한 전체 13장 가운데 한 장에서 간략히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연구에서 이상민(2001)은 해외 평가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크게 확장시켰다. 그는 ICA/IRMT의 평가체제 구축 교재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최근의 평가이론 동향을 영역별로 소개하면서 주요 국가의 연구문

서 선별 기준을 검토했다. 셀렌버그와 붐스 이외에도 헨렌 사무엘스(H. Samuels)와 테리 쿡(Terry Cook)의 기능적 평가와 거시적 평가, 그리고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콕스(R. Cox)와 비어만(Bearman)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방식 등을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당대의 논쟁적 의미를 부가하여 소개했다. 그의 논문은 외국 저서와 잡지를 체계적이고 풍부하게 소개하면서 기록물 평가론을 정리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김명훈(2002)은 붐스의 주장과 도큐멘테이션 전략, 기능평가 등을 포함해 기록의 사회적 맥락과 배경을 강조하는 이론 및 생산자 중심의 기록물 가치와 이용자 중심의 가치 충돌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미국과 유럽의 기록관리 전통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그는 해외 이론을 국내 공공기록물의 평가체제에 대비시킨다. 예를 들어, 라이프사이클에서의 중간기록물관리기관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료관에는 영구기록물 선별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 그는 기록물법령의 평가체제가 최근 기록학의 이론적 사조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현실적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재구성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연구에서 김명훈(2005)은 조직의 근본 변화, 기능 업무 프로세스의 대대적 변모, 전자시스템과 같은 전자기록의 속성을 정리하면서 다원성 및 복잡성을 지닌 기록물 생산 환경 등 전자기록 평가상에 나타나는 특성을 논의하고자 했다. 나아가 그는 전자기록 평가체제 구축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4대 논점(평가 시기, 진본성 확보, 필요조건으로서의 메타데이

터, 비용 및 기술력 분석)을 제시했다.

이승억(2002)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고찰할 수 있다. 그는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의 주요 개념들(기록 그 자체, 기록전문직, 기록보존소, 기록관리에 관한 원칙과 기법)을 재검토했다. 그는 현대 평가론이 무엇이 기록되었는가 보다는 무엇이 기록되어야 하는가를 주목하며 사회·문화·정치·경제적 배경들이 기록이 만들어지는 암묵의 네러티브(tacit narrative)를 결정함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억은 기록의 불편부당성은 절대적 공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담긴 생산자의 성향이나 편견이 충실하게 반영된 상대적 공정성을 의미한다는 듀란티(L. Duranti)의 해석, 중시되어야 할 기록의 의미는 생산 시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만들어진 기록이 처리되거나 활용될 때도 발현된다는 탈전통적 사고, 사회적·문화적·정치적 맥락이 함의된 광범위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 기록의 복합적인 의미가 배열되는 동적 질서를 강조한 케텔라르(E. Ketelaar)의 의미계통(semantic genealogy), 그리고 업워드(F. Upward)의 기록연속체 모델(records continuum) 등의 평가이론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석했다.

김명훈(2005)은 이승억의 연구가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개념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전자기록 평가방식상의 지향점을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전자기록의 평가 문제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승억의 연구는 기록물 평가론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 유용한 진지한 인식론적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연구에서 이승억(2005)은 젠킨슨(H. Jenkinson)은 물론 브룩스(P. Brooks)의 라이프사이클 이론에서부터 쉘렌버그와 바우어(P. Bauer), 마이클 쿡(M. Cook), 메네-하리츠(A. Meene-Haritz) 등 서구의 기록물 평가이론을 소개했다. 나아가 '사회의 표상'이라는 절에서 햄(G. Ham)과 테리 쿡을 중심으로, 현대 기록물 평가론의 중심이 되는 기록물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 이론과 기록관리 국제표준과 관련하여 기능평가의 함의를 정리했다. 나아가 그는 기록의 특성, 가치, 맥락으로부터 도출된 각각의 지표를 통해 평가 선별 결정에 이르는 기준과 그 과정을 제시했다.

김현진(2006)은 독일 기록관리에서의 평가론 추적을 통해 현대 평가론 담론의 유럽적 지향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독일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9세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바이마르 시대와 나치 이후를 구분하여 독일에서의 평가론이 증거의 필요성을 거쳐 연구지향의 평가로, 다시 출처주의를 거쳐 내용지향적인 평가 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거시평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이승억(2006)은 거시평가의 전 과정의 이행을 포괄하는 전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평가의 착수부터 최종 완결까지 실천모형을 만들어 거시평가 도입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했다. 그는 거시평가의 주요 논점(아키비스트의 평가선별 개입을 포함한 신 젠킨슨주의 관점의 기록가치, 사회의 포괄적인 기록화를 위한 기록화 대상, 기록생산 맥락 이해 등)을 정리하면서 하향식 기능평가와 상향식 검토라는 거시평가 방법론

을 국토개발정책 수립 분야에 적용하고자 했다.

나영선(2008)은 실제 캐나다에서 진행되는 거시평가 제도와 운영을 분석했다. 그는 기록을 통해 당대의 사회상을 형성하고자 하는 거시평가의 지향점과 더불어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정부의 기능분석을 통해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식별하고 국가와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체적 방법론을 세밀하게 소개했다. 나영선은 국내에서 실행되는 단위과제 단위의 기록물 평가는 상위기능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반하지 않고 기관 내부의 가치에 집중된 평가 결과를 초래하여 기록의 사회적 가치가 투영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DIRK 매뉴얼이나 ISO 15489는 적용범위가 개별기관 단위이고 개별기관 내부의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에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당대의 사회상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기록원 자체의 '거시적 평가'를 개발을 제안한다.

사실 기능평가 이후의 대부분 평가 이론은 전자기록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익한(2006)은 일치 검증, 내용 동일성 확인, 메타데이터 요소의 적절성, 불법 변경여부 확인, 물리적 상태 확인 등 전자기록의 진본 여부에 대한 평가 문제를 제기하여 평가 연구의 대상을 확장시켰다. 앞으로 전자기록 환경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평가 문제를 실무적, 이론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천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 기록물 보유일정표

기록물법 제정을 전후로 법률의 핵심 내용이

라 할 수 있는 분류기준표에 대한 연구가 대거 등장했다.

김재순(1996)은 기록보존정책의 부재 등 과거 기록보존전통과의 단절을 막기 위해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해 기록평가업무를 새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공문서 생산, 이관 및 보존절차에서 보존폐기여부를 심의하는 단계를 강화시켜 보존대상 국가기록물을 정확하게 선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했다. 김재순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문서의 분석을 통해 판결문, 사건부 등과 같이 개인들의 신분증빙을 위한 문서들은 영구보존문서로 분류되어 있으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자료 등과 같이 역사적 사건의 실상을 규명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문서들은 공소만료와 함께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 등 유한 문서로 분류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는 기록물 평가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공문서 보존연한 책정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하고, 기록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기록평가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록보존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연구에서 김재순(1997)은 일제시대에 문서결재권자의 직급과 식민통치를 위한 참고자료로의 활용여부에 따라 총독부문서의 보존연한이 갑(영구), 을(30년), 병(10년), 정(3년), 무(폐기)로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규정과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 시기로 구분하여 공문서보존연한 변천을 추적하고 있다.

이원규(1998)는 기존 공문서분류제도의 문제점으로 행정활용 위주의 시각만이 적용되었

고 선별, 평가 등의 중요 절차가 누락되었으며 전문성이 결여된 채 자의적으로 관리되어온 점을 지적했다. 그에게 향후 만들어질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을 전문화 표준화시키는 시도였다. 그는 대규모 중간기록보존소를 특징으로 하는 영미형과 일선기관에 소규모 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는 프랑스나 중국과 같은 대륙형을 소개하면서 우리 현실에서는 대륙형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공통기록물관리일정(GRS)과 기록물관리일정(RS), 중국의 기관공통, 분야별 당안보관기한표, 일본 가나가와현 선별기준 등 외국의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근거로 영구보존기록물 선별의 일반기준과 세부기준, 한시기록물의 보존기간 분류기준을 설계하기도 했다.

김태웅(1999)은 기록물법의 핵심이 생산 단계부터 보존 및 폐기 단계까지 공공기록물의 처리 일정을 규정하는 분류기준표 작성을 고시한 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출처기관별 원칙에 입각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정 방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했다. 박성진(2002)은 보존문서 책정 기준에 수반된 현재의 가치개념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서, 조선총독부는 공문서 보존기간 특히 영구보존을 어떤 기준하에 어떤 공문서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공문서 보존에 대한 이들의 가치개념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1886년 내무성문서보존규칙 이래 일본의 문서 보존 중별구분 기준과 조선총독부 공문서 보존기간의 구체적 유형을 고찰했다. 그는 총독부 공문서 제도가 해방 이후 우리의 공문서 보존제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정 업무 진행의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성 공문서가 영구보존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승역(2001)은 효력 중심의 기록보존이 아닌 포괄적 문서화, 조직-업무활동-기록물 의 연계, 행정적·법적 시각에만 의존한 보존기간 책정에서 역사적·거시적 시각의 적용 등 분류기준표에 의해 달라질 핵심내용을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이 제도를 라이프사이클이 아닌 연속체 개념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서튼(J. Atherton)의 확대된 8단계 라이프사이클과 호주의 DIRK 매뉴얼 자세히 소개했다.

2004년 분류기준표의 시행을 앞두고 민간영역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과 기대가 제시되었다. 최정태와 이주연(2003)은 1964년, 79년, 85년, 93년 공문서분류표의 특징을 소개했고, 김정남과 최정태(2004)는 기록물처리일정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구성요소를 설명하면서, 소장 기록물 조사에서 소장목록 평가, 기록물처리일정표의 작성,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업무 절차를 소개했다.

박유진(2003)은 분류기준표의 구성요소나 특성보다 운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분류기준표 운영원칙(분담과 협력, 조직 및 기능 변화와 가치 평가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 전산관리방식에 의한 효율적 운영)과 운영절차(조사 수행과정, 처리과 및 단위업무 신설변경폐지절차)를 분석했다. 임나래(2007)는 분류기준표를 통해 생산단계 및 생산기관 자체에서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으며 영구문서의 선별 또한 비활용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기록물에 대해

이루어지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이러한 활용성과 영구보존성의 동시 평가를 강조하면서 분류기준표를 중심으로 생산, 등록, 수집, 폐기 등 기록관리 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2005년을 전후하여 진행된 기록관리 혁신과 더불어 그동안 논의되던 분류기준표의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업무기능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분류기준표 제정, 기록물 가치에 대한 정확한 기준 없는 보존기간 책정, 단위업무 누락, 단위업무와 단위사안 혼동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분류기준표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논문들이 나타났다.

김정남(2006)은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단위 업무를 분석해 분류기준표에서 동일한 기능에 다른 단위업무 명칭이 사용되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설문원(2006)은 공공업무의 체계적 기록화를 위한 분류기준표를 대신할 기록관리기준표의 역할 및 구조 재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화 호주의 보유일정표 체계와 구조, 구성요소를 기존의 분류기준표와 비교하면서 기록관리기준표가 새로운 유형과 구조를 가진 보유일정표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상과 같이 기록물법 제정, 그리고 분류기준표 시행과 폐지를 전후로 한 시기에 기록물의 평가를 실행에 옮기는 보유일정표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BRM에 연동된 기록관리기준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처음으로 기록물 보존기간 결정에 기록학적 관점을 투여했던 분류기준표 제정 당시의 열광에 비해, 시행 5년째에 접어들고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확산되는, 그리고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기록관리 영역의 개입이 극소화된 기록관리기준표에 대한 논의가 없

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3.3 재평가

여기서 말하는 재평가는 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말한다. 서은경(2006)은 대부분의 기록물이 지닌 가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루어진 선별 결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시대 흐름에 따라 기록물 평가 기준에 되는 가치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기존 기록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래퍼트(L. Rapport)와 햄의 논지를 중심으로 베네딕트(K. Benedict)와의 논쟁을 소개하면서 재평가 원칙과 이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논지는 국내 공공기록물 평가 현실에 적용하기에 일정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스스로도 '사기록관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붙인 것 같다.

이에 비해, 류신애와 이승휘(2010)는 전자기록 환경과 거시평가가 주요 평가 전략이 된 지금 재평가가 지니는 의미가 더 확대되었음을 지적한다. 기능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사전 평가 과정은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당대의 사회상을 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전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업무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기록관리기준표 중심의 현행 평가제도는 지속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행 재평가제도는 이를 보완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이들은 주제 기반의 평가를 통하여 현행 평가제도

를 보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서은경이 말하는 재평가의 주체는 기록물보존기관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대상이었으나, 류신애와 이승휘는 '이미 내려진 평가를 다시 검토하는' 기관은 모두 재평가의 주체가 된다고 보고 기록관에서 행해지는 평가심의회 단계를 재평가라 칭하고 있다. 두 논문의 목적이나 연구배경은 동일하나 적용 대상이 다르다. 더 중요한 점은 서은경이 영구 보존 대상 기록물의 기득권을 부정하고 이들의 폐기나 처분을 주장한 반면, 류신애와 이승휘는 평가 당시는 중요하지 않았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요해진 기록을 찾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현대 재평가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기록관 평가심의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천권주와 김효민(2010)은 육군 특수기록관 사례를 들어 재평가 단계에서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평가심의회와 보존가치 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기록의 역사성, 유일성, 중요성, 증거력 등 평가요소를 설계해 생산자 의견조회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에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재평가 결과를 기록물 보존기간 재책정으로 연결시키자는 류신애와 이승휘의 주장처럼, 기록관에서 수행하는 최적화된 평가 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 변경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곽건홍(2011)의 분석처럼, 각급기관의 문서과와 기록관이 분리되지 않았고 기록전문직이 문서과와 기록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

이 관행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록물법에서 새로이 규정된 기록물의 분류평가 등 기록관의 전문적 업무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이는 기록전문직의 역할 자체에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평가는 기록전문직의 핵심 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기록관 평가심의회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제기되기를 기대한다.

3.4 민간기록물 평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일제시기 총독부 도시계획기록을 평가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2005년과 2006년에 그 결과물이 발표되었다. 총독부 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이지만 기록학적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보존되고, 기록을 생산한 조직의 위상과 기능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록 생산 맥락이 대체적으로 불분명한, 그리고 부분적이고 불균등하게 남아있는 기록물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성격의 기록물에 대해 다양한 평가론을 적용한 최초의 시도였으며 민간기록물의 국가지정을 위한 평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상민(2006)은 기록의 본원적 가치에 대한 논쟁, 쉐렌버그의 정보가치 평가론, 미래의 이용가치와 경제성 논리에 기반 한 소장기록 재평가론, 기능평가, 도큐멘테이션 전략 등을 적용했고, 역사적 기록이 갖는 정보가치에 대해서는 미시적 평가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승일(2005)은 거시적 기능분석과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이용해 총독부 기록물을 평가하려 했다. 김익한(2006)은 총독부

문서와 같이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은 일반적인 평가이론과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기록의 내재적 가치 평가와 업무행위를 평가하는 기능평가의 철학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절충을 추구했다. 이상민은 이를 역(逆)도큐멘테이션 전략이라고 평했다. 이승순(2006)도 같은 프로젝트에서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의 분류와 평가를 시도했으나 역사적 사실 설명과 보완에 무게를 두었다.

박성수(2010)는 사찰기록의 관리 체계화를 위해 사찰의 업무기능에서 생산될 수 있는 기록물을 파악하여 사찰기록물 기록관리기준표와 보존기간 책정 기준 시안을 제시했다. 김재훈과 이경훈은(2006) 기록물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만 전시 대상 기록물을 선정하면서 그 기준으로 중앙기록관 소장기록, 기록의 역사성, 희귀성과 특이성, 대중의 호감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록 및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증대되어감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기록물 또는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되어온 기록물에 대한 평가가 늘어날 것이다. 총독부 문서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가 그러했듯이 기록물의 특성과 유형, 보존 방식에 따라 적합한 평가 방식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독립 기록군은 물론 상호 유기적 연계를 가진 혼합 기록군의 평가에도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설문원(2010)의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연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는 아키비스트가 지역 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를 포괄적으로 기록화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될 것을 주문한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설문원은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기록화를 위해 로컬리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영역과 대상을 선정하고, 지역 게이트웨이 구축을 통한 분산 보존과 통합적 재현, 그리고 열린 구조의 디지털 기록화를 지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방식은 평가이론과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이며 이론과 실무의 조응에 해당한다. 국내의 평가론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설문원의 주장처럼, 기록정보의 확대 뿐 아니라 아키비스트의 전문성과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4. 맺음말

이상 국내에서의 기록물 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의 동향과 양적인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현재적 의미에서 볼 때, 양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직 전문가들의 참여가 급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용적으로, 기록물 평가와 관련된 주요 외국의 평가이론과 방법론, 논자들의 주장과 논쟁 등이 대부분 소개되고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내 연구들이 단순한 소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외국 평가이론과 방법론을 국내 기록관리 실무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번민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김익한은 이를 '후발성의 이익'을 위한 시도로 명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국내 공공부문의 평가제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06년까지 활발했

던 공공기록 평가제도와 방법론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도 거의 사라졌다. 이론과 실무의 불일치가 한국 기록물 평가론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한계이다.

2005년 여름, 처음으로 중앙행정기관에 기록연구사가 배치되었으며 국가기록원도 기록연구사를 선발했다. 이때 학예직렬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기존의 학예직들은 농담 반진담 반으로 이제 기록관리에서 학예직은 단종되었다고 자조적으로 말하곤 했다. 7년이 흐른 지금, 이러한 농담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 기록물 평가는 기록관리 전문가의 영역을 떠나고 있다. 기록관리의 다른 영역에서도 기록전문직의 전문성은 무시되거나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된 구조적 이유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우리의 기록관리는 법률에 의존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법률은 포괄적 기준이며 세밀하게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 법령을 유기적으로 보완하는 정책, 가이드, 표준,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기록물법이 있고 법률의 정신을 반영한 평가정책(Appraisal policy)이 있다. 그리고 평가정책 설명가이드(Appraisal policy background paper)와 기록선별 일반가이드(General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of records), 그리고 기록물선별실무지침(Operational Selection Policies)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우리도 평가영역에서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해외의 많은 평가이론이 소개되었고 누구나 셀렌버그를 포함해 유명 이론가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평가 실무는 실제

어떻게 진행되며 구체적 평가기준과 그 적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기는 힘들다. 호주의 고유기능 기록물 처분일정표(RA)와 같은 것을 번역해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

한 분야들이 앞으로 기록물 평가영역에서 학계와 공공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한다. 반복하지만, 이론과 실무의 조율이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 곽건홍. 2010. 기록관 체제 재검토 『기록학연구』, 27: 3-33.
-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417-439.
- 김규환, 남영준. 2009.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17-239.
- 김명훈. 2002. 공공기록물의 평가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기록학연구』, 6: 3-40.
- 김명훈. 2005.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1: 90-121.
- 김익한. 1998. 기록물 관리체계론 및 평가분류의 새로운 흐름. 『기록보존』, 11: 61-75.
- 김익한. 2006: A.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의 평가 방법 시론. 『기록학연구』, 13: 179-203.
- 김익한. 2006: B. 전자기록의 진본 평가 시스템 모형 연구. 『기록학연구』, 14: 91-117.
- 김재순. 1996. 기록평가 사례연구(I). 『기록보존』, 9: 39-51.
- 김재순. 1997. 국가기록 분류체계의 변천과 개선방향. 『기록보존』, 10: 79-91.
- 김재훈, 이경훈. 2006.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역사기록전시. 『기록학연구』, 13: 287-320.
- 김정남, 최정태. 2004. 기록물처리일정표의 작성과 유지 관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1): 43-65.
- 김정남. 2006.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43-65.
- 김태웅. 1999.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정과 전망. 『기록보존』, 12: 159-173.
- 김현진. 2006. 독일 기록관리 담론에서의 평가론. 『기록학연구』, 14: 325-357.
- 나영선. 2008. 캐나다 거시평가 제도의 운영현황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89-104.
- 남태우, 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51-472.
- 류신애, 이승휘. 2010. 공공기록물 재평가 제도 보완 방안. 『기록학연구』, 24: 41-71.
- 박성수. 2010. 사찰기록 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6: 333-62.
- 박성진. 2002.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보존기간 책정기준과 가치평가. 『기록보존』, 15: 7-25.
- 박유진. 2003.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운영과 과제.

- 『기록학연구』, 8: 57-95.
- 서은경. 2006. 기록물 재평가 및 처분을 통한 보존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35-51.
- 설문원. 2006. 공공업무의 체계적 기록화를 위한 보유일정표 설계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4): 199-219.
-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 이상민. 2000. 전자기록물의 관리 원칙. 『기록보존』, 13: 119-144.
- 이상민. 2001. 영구보존기록의 선별과 가치평가. 『기록보존』, 14: 87-119.
- 이상민. 2006. 일제시기 총독부기록과 도시계획 기록의 평가 혹은 재평가: 이론적 쟁점과 평가의 실제. 『기록학연구』, 14: 3-51.
- 이송순. 2006. 조선총독부 시가지계획 관련 공문서의 분류와 평가. 『기록학연구』, 14: 53-89.
- 이승억. 2001.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 체계 전망: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도적 의의와 특성. 『기록학연구』, 4: 31-62.
- 이승억. 2002.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개념에 관한 재검토. 『기록학연구』, 6: 73-120.
- 이승억. 2005.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2: 37-80.
- 이승억. 2006. 공공기록에 대한 '거시평가(Macro-appraisal)' 적용 시론. 『기록학연구』, 14: 119-152.
- 이승일. 2005. 총독부 공문서의 기록학적 평가. 『기록학연구』, 12: 179-235.
- 이원규. 1998. 공공기록물 보존기간 책정론: 외국사례의 검토와 더불어. 『기록보존』, 11: 77-107.
- 임나래. 2007. 가치분석에 의한 기록관리 선순환 체계의 모색. 『기록학연구』, 15: 263-306.
- 장로사, 김유승. 2009.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87-100.
- 천권주, 김효민. 2010.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육군 특수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3: 45-86.
- 최정태, 이주연. 2003. 한국공문서분류의 변천과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보존』, 16: 239-263.